



- 한국원산지정보원, 「2026년 하반기 원산지인증수출자 사후관리 지원사업」 안내
- 한국원산지정보원, 美 수출 '원산지' 판정 사례 분석 보고서 발간
- 관세청, 탄자니아에 한국형 원산지관리시스템 첫 전수
- FTA 동향
 - ① 한-UAE CEPA 발효
 - ② 한-중 FTA 후속협상, 서비스·투자·금융 3개 분야 집중 논의
 - ③ 발효 20년 된 한-싱가포르 FTA 개선 협상 개시
 - ④ 산업부, 한-멕시코 FTA 협상 재개 논의

TRADE & ORIGIN 동향

한국원산지정보원, 「2026년 하반기 원산지인증수출자 사후관리 지원사업」 안내

한국원산지정보원은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FTA 활용을 돕기 위해 「2026년 하반기 원산지인증수출자 사후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최근 전 세계적인 자유무역협정(FTA)의 확대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라, 수출 현장에서는 원산지 검증 및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에 한국원산지정보원은 본 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들이 원산지인증수출자 사후관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산지 검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하반기 사업의 신청접수는 7월 중 진행될 예정이며, 신청 방법 및 세부 일정 등은 추후 한국원산지정보원 누리집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원산지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기업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사후관리 지원 사업

- 사업명** 2026년 하반기 원산지인증수출자 사후관리 지원 사업
- 사업기간** 2026년 7월~12월
- 접수기간** 7월 중
- 지원자격** 원산지 사후관리 대비가 필요한 원산지인증수출자인 중소기업
- 지원방법** 컨설턴트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 지원
- 지원내용** 원산지인증수출자 사후관리 사전대비 및 모의 사후관리 점검을 통한 기업의 원산지 관리 능력 강화



원산지 판정 교육

▶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판정방법, 충분가공 등 실무 적용을 위한 이론 교육



서류작성 및 관리 보관

▶ 원산지증명서·소명서·확인서, 자재명세서, 제조공정도 등 서류 작성 및 관리·보관 방법 안내



자율점검 실습 및 모의 사후관리 점검

▶ 자율점검표 작성 실습 및 모의 사후관리 점검을 통한 원산지관리 현황 점검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요건 유지확인

▶ 원산지전담자 지정 및 원산지관리시스템(설명서) 활용 등 인증 자격요건 유지 확인

※ 상기 일정과 세부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무부서 : 한국원산지정보원 원산지관리팀)

한국원산지정보원, 美 수출 '원산지' 판정 사례 분석 보고서 발간

한국원산지정보원에 따르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최근 공급망 내 어느 국가에서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일어났는지를 따지는 비특혜 원산지 판정 비중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사진 : 한국원산지정보원

이는 제품을 어디서 최종적으로 완성했느냐보다 제품의 기능을 결정짓는 핵심 부품이 어디서 생산되었는지가 관세 부담과 통관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CBP의 사전심사 결정문 중 원산지 관련 판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대 중반까지 1% 미만에 불과했으나, 2025년 기준 약 35%까지 급증했다. 특히 자동차 부품의 경우 필터 매체나 도체·코어가, 전자제품은 PCBA가, 제약 분야에서는 원료의약품(API)의 제조 공정이 원산지 판정의 향방을 가르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단순 조립 공정만 거쳐 미국으로 수출하던 기업들은 자칫 '원산지 위반'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어 공급망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러한 통상 환경 변화에 발맞춰 원산지정보원은 우리 수출기업의 원산지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미국 원산지 판정사례 심층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도출된 CBP의 사전심사(Administrative Rulings) 판정 사례를 국내 최초로 전수 조사하여 분석한 자료다. 보고서에는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등 10대 핵심 품목군별 판정 사례와 함께 제조공정, 부품 구성, 기능 요소 등 CBP의 구체적인 판단 논리가 상세히 수록됐다.

김일권 한국원산지정보원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부와 체계가 원산지에 따라 엄격히 차등화됨에 따라, 정확한 원산지 판정은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가 됐다”며 “우리 기업들이 이번 보고서를 통해 대미 수출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공급망 전략을 재정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원산지정보원은 이번 보고서 발간을 시작으로 자체 정기 간행물인 'Origin Case' 시리즈를 통해 최신 판정 사례를 지속 제공하고, 관세청 및 KOTRA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 통상정책 관련 정보 공유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관세청, 탄자니아에 한국형 원산지관리시스템 첫 전수

이명구 관세청장은 서울세관에서 탄자니아 잔지바르 지역 조세청장을 비롯한 고위급 대표단과 면담을 갖고 양국 간 관세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무역원활화와 통관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전략적 파트너십을 한층 공고히 하고, '탄자니아 싱글윈도우(잔지바르) 및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뜻을 모았다. 관세청은 사업의 안정적 이행을 통해 양국 간 전자통관 협력 성과를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번 사업은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인 UNI-PASS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원산지관리시스템이 독립적으로 해외에 진출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기존 통합 시스템 수출에서 나아가 기능별 모듈 수출로 확장되는 새로운 모델로, 향후 해외 진출 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사진 : 관세청

탄자니아 측은 한국의 관세행정 디지털화 경험을 자국 시스템에 접목하는 데 높은 기대를 표명했다. 아울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한국 관세청의 지속적인 기술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단순한 시스템 구축을 넘어, 디지털 통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장기적 협력 관계 구축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이를 통해 한국의 관세행정 모델이 아프리카 시장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주목된다.

FTA 동향

① 한-UAE CEPA 발효

2026년 5월 1일,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발효되며 양국 간 교역 확대 기반이 마련됐다. 자동차와 부품, 화장품, 식품 등 주요 품목의 관세가 철폐되면서 수출 여건이 개선되고, 인공지능(AI), 재생에너지, 문화산업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협력 확대가 기대된다.

UAE는 2025년 기준 한국의 대중동 최대 수출시장으로, 약 57억달러 규모의 교역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UAE가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교역 및 투자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이번 협정은 인근 시장으로의 진출 확대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아랍권 국가와의 첫 CEPA라는 점에서도 상징성이 크다.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관세 철폐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 품목도 뚜렷하다. 승용차와 전기차 등 자동차 및 부품을 비롯해 화장품, 식품, 합성수지, 가전제품, 의료기기 등이 주요 유망 분야로 꼽힌다. 이들 품목은 기존 약 5% 수준의 관세가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화장품 분야는 성장 가능성이 두드러진다. 한국의 대UAE 화장품 수출은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 경쟁국들이 CEPA를 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 점유율 확대 여지가 크다는 분석이다. 전체적으로 한국은 92.8%, UAE는 91.2%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이와 함께 산업 전반의 협력 확대도 기대된다. AI·데이터센터, 원자력, 재생에너지 등 첨단 및 친환경 분야에서 협력 기회가 확대되고, 'UAE K-CITY' 조성을 통한 문화·ICT 융합 산업도 주목된다. 이번 CEPA는 단순한 관세 인하를 넘어, 양국 간 전략적 경제협력을 심화시키는 계기로 평가된다.

② 한-중 FTA 후속협상, 서비스·투자·금융 3개 분야 집중 논의

우리나라와 중국은 2015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이후 '후속 협상을 위한 지침'에 따라 2018년 3월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개시했고, 이후 13차례 공식협상과 다수의 회기간 회의를 통해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한·중 경제공동위원회에서는 △무역·투자 활성화 △공급망 안정 관리 △역내·다자 협력 강화 등을 중심으로 양국 경제협력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다.

특히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과 관련해 단순한 협상 지속을 넘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 협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으며, 이를 위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 조성 및 기업 애로 해소 방안도 논의됐다.

또한 공급망 협력이 주요 의제로 부각됐다. 양측은 핵심광물, 희토류 등 전략 자원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협력 채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이 효율성 중심에서 안정성과 안보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 속에서, 상호 의존 구조를 보다 전략적으로 관리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양국은 정상외교와 연계해 경제협력 모멘텀을 복원하고, APEC·G20·RCEP 등 다자 협력 플랫폼에서도 공조를 확대하기로 했다.

전반적으로 이번 회의는 한·중 경제관계를 기존의 단순 교역 확대에서 벗어나 공급망 안정, 첨단 산업, 투자 환경 개선 등 실용 중심의 구조적 협력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평가된다.

③ 발효 20년 된 한-싱가포르 FTA 개선 협상 개시

정부가 싱가포르와 자유무역 협정(FTA) 개선 협상에 본격 착수하며 양국 간 경제협력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2006년 발효된 한·싱가포르 FTA가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가운데, 이번 협상은 기존 협정의 한계를 보완하고 새로운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싱가포르에서 협상 세척에 서명하며 협상 개시를 공식화했다.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이번 FTA 개선 협상은 공급망, 그린경제 등 신통상 이슈를 반영한 '모듈형 협정' 도입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글로벌 통상 규범 변화에 대응하고, 기존 협정의 규범을 현대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단순한 시장 개방을 넘어 협력 범위를 구조적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협상은 정상외교를 계기로 속도를 내고 있다. 양국은 공급망, 그린경제, 항공 유지·보수·운영(MRO), 무역원활화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1차 협상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고위급 회담을 통해 투자 확대와 산업 협력 방안도 병행 논의됐다.

또한, 이번 협상에서는 에너지 및 자원 협력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정부는 글로벌 트레이딩 기업 및 원자재 정보기관과의 면담을 통해 에너지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했다. 또한 국내 정유업계와 간담회를 통해 원유 및 나프타 수급 상황을 점검하는 등 에너지 안보 측면의 협력 기반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투자 및 산업 협력 확대를 위한 행보도 이어졌다. 싱가포르 국부펀드와의 협력을 통해 첨단산업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전자상거래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K-소비재의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를 모색했다. 아울러, 스마트 제조와 물류 자동화 현장을 점검하며 미래 산업 협력 가능성을 확인하는 등, 이번 협상이 우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경제 성과로 이어질 기반을 마련했다.

④ 산업부, 한-멕시코 FTA 협상 재개 논의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26년 4월 30일, 한·멕시코 간 경제·통상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남미 최대 교역 파트너인 멕시코와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양측은 한·멕시코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 간 교역과 투자 확대를 견인할 핵심 수단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2022년 이후 중단된 FTA 협상의 조속한 재개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고위급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양국 간 경제협력을 제도적으로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의지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한국 측은 멕시코의 최근 관세 인상 조치와 향후 예정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관련 변화에 대해 우리 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아울러,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관심을 요청하며, 현지 애로사항 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멕시코를 북미 공급망 진입과 중남미 시장 확대를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보고 있다. 특히 USMCA 체제와 연계된 생산·유통 네트워크 활용 측면에서 멕시코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향후 협력 강화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